

‘이낙연 신당’ 민주 텃밭서 거세지는 반발

지역 예비후보 20명 반대 성명

“尹 검사정권 심판 저버리는 행위” 친낙계 정치인도 “분열은 안된다” 민주 지지층 반대 여론 70% 넘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 정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0여명이 ‘만류 연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광주·전남 지역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단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년 총선 광주·전남 출마예정자 20명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검사 독재 종식의 희망을 꺾는 정치적 반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년간 민주당의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호사를 누린 분이 윤석열 검사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저버리고 사육을 채우려 한다”며 “지금이라도 분열의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광주에서 강위원(서구갑), 박군택(광산갑), 안도걸(동남을), 양부남(서구을), 이정락(동남을), 전진숙(북구을), 정재혁(광산을), 정준호(북구갑), 정진욱(동남갑), 조현환(북구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광주·전남 출마예정자 20명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을), 최치현(광산을), 최회용(서구을) 등 12명이 참여했다.

전남에서는 김명선(목포),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병도(영암무안신안), 박노원(담양함평영광장성), 배종호(목포), 정의찬(해남완도진도), 조계원(여수을), 최영호(고흥보성장흥강진) 등 8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려면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사육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 낭인으로 추락할지, 국민과 역사에

헌신하는 정치가가 될지는 오롯이 이 전 대표에게 달렸다. 지금이라도 분열의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만약 내년 초에 신당 창당을 결행한다면 민심 분노의 불길 속에서 참담하게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응을 자제해온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하면서, 계파를 불문하고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광주·

전남 지역정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신성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을 고치려는 것보다 울타리를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전남도당 고문단은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며, 민주당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낙계 인사’로 불려온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역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조려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 민주당

이라는 배를 지킬 것”이라고 신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당을 나가서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써야 한다. (싸우더라도) 당 안에서 해야 한다”며 당의 분열보다는 화합을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 길을 가 본 경험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10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그 길은 가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이낙연 전 대표와 동행할 현역 의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고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한 물음에 46%는 ‘좋지 않게 본다’(표본 오차 95%)고 답했다.

정당 지지자별로 살펴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부정적’이 71%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54%는 창당을 좋게 평가했다.

갤럽 측은 “이낙연 신당 창당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여론에서 반기는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김은지 기자

시·도의회 “영산강 유역 상생발전·수질 개선 협력”

지속가능 물관리 정책토론회 “도시 물순환 체계 구축해야”

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영산강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두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영산강유역권의 상생발전, 수질 개선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광식 전남대학교 교수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역할’, 최원석 광주시 물관리 정책과장은 ‘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신재욱 광주시 친수공간과장은 ‘영산강100리길, Y프로젝트’, 박승영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태화강 사례로 본 영산강 수질보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러진 토론에서는 최치현 광주시의원, 김호진 전남도의원, 김종일 전남탄소

중립지원센터장, 최낙선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영산강살리기 협력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호진 전남도 의원은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다. 영산강 수질 개선 종합 계획을 세우려면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산강과 낙동강간 비교하더라도

낙동강에는 5년간 약 2조800억원이 수질 개선 사업비로 투입됐다. 반면 영산강의 경우 35년간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며 “5년, 35년의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투입된 비용은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는 영산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고 보조율을 80~90% 이상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치현 광주시 의원은 “영산강이 직면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돼온 것으로,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며 “분류 유량 확보, 수질, 녹조 하구둑, 기후 위기로 인한 물재난, 불투수층-지하수 등 영산강의 문제 등은 농업용수 확보 중심의 개발과 구조적 한계로 지금껏 타협점

을 찾지 못해왔다”며 “이제는 Y프로젝트를 비롯, 농업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지역민의 협의 체계를 만들어 도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계곡수 등 불명수를 지류천에 흐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영산강유역권의 상생발전,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는 수십 년의 과제다”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협력해 영산강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최근 1년 광주·전남지역 신규노령연금 수급자/수급액 (2022년 8월~2023년 7월)

- 광주: 총 9천 8백여명/월 평균 연금액: 약 67만원
- 전남: 총 1만 5천여명/월 평균 연금액: 약 62만원
- 광주: 누적 약 50만원 ▶ 최근 1년 67만원, **약 17만원 ↑**
- 전남: 누적 약 44만원 ▶ 최근 1년 62만원, **약 18만원 ↑**

■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누적노령연금 통계

연도	광주 수급자수	전남 수급자수	광주 월평균 수급액	전남 월평균 수급액
2013년 7월	약 6만여명	약 16만여명	약 31만원	약 25만원
2018년 7월	약 8만여명	약 22만여명	약 37만원	약 32만원
2023년 7월	약 12만여명	약 24만여명	약 67만원	약 62만원

※ 위 수치는 국민연금 월별통계 갱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 **쑥**
만족 **쑥쑥**

국민연금공단이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튼튼한 연금
튼튼한 노후

우리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전남 지사 직원 일동